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온라인 여성혐오 철폐를 위한 수사 실시 및 제도 정비¹⁾

- 2024년 3월, 독일 수사당국은 온라인 여성혐오 발언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두 명 정도에 그치는 소규모 수사가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주제에 적극적인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여러 연방 주들(states)과의 협의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본 원고에서는 독일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여성혐오를 철폐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 및 실질적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시행한 것은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2024년 3월 7일로, 독일의 전국 11개 주에서 온라인에 여성혐오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특정되는 용의자 45명을 수색하거나 심문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국(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BKA)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수사 이후 구금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지난 몇 달간 37명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자택 수색 및 심문을 시행한 바 있다.
- 수사당국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성폭행을 옹호하는 등의 여성혐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해 수사 대상을 특정했다. 이번 수사는 형사법(Criminal Code)을 적용했는데, 보다 세부적으로는 비헌법적, 테러 조직을 나타내는 상징 사용(86조a), 국민선동(111조), 모욕죄(185조), 정치인 대상 모욕 및 명예훼손(188조)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온라인 여성혐오 콘텐츠 중에는 특정 여성 정치인들을 겨냥한 모욕성 발언도 상당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 홀거 뮌히(Holger Muench) 연방범죄수사국(BKA) 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국은 온라인상에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희롱, 차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이러한 가해 행위를 익명의 가면에서 끄집어내 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했다. 이어 뮌히(Muench) 국장은 이번 조치가 2년 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수사당국 담당자들의 시범사업이 발전되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2024년 3월 대규모 수사에 참여했던 바바리안주 범죄수사국(Bavarian State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에 따르면, 귀도 리머(Guido Limmer) 부국장은 "모욕, 위협, 성차별적 폭력 등과 같은 행위가 갈수록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온라인상 여성혐오 콘텐츠는 성평등이라는 근본적인 인권 가치 자체를 훼손하고 있으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점을 밝혔다.

- 2018년부터 독일은 온라인상 혐오 발언 철폐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집행법(Network Enforcement Act)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정부 당국으로부터 최대 5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그리고 2021년 4월, 독일 의회는 극우주의 및 혐오 범죄 철폐에 관한 법(Act on Combating Right-Wing Extremism and Hate Crimes)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2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연방범죄수사국(BKA)에 해당 콘텐츠 내용과 IP주소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폭력적인 언어나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는 당국 내 신설된 온라인 범죄 콘텐츠 중앙보고국(Central Reporting Unit for Criminal Content on the Internet, ZMI)으로 전달되며, 약 200명의 인력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리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독일의 제도적 준비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혐오 콘텐츠 철폐라는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네트워크 상의 글이 혐오 콘텐츠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도, 연방범죄수사국도 아닌 네트워크 서비스업체들이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책임소재 문제점 등을 사유로 해당 제도에 맞서 상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분야와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검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연방범죄수사국(BKA)은 일단 혐오 콘텐츠가 보고되면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와 처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방대한 양의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일일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로는 범죄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더라도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가 혐오 콘텐츠로 오인하게 되면 최대 일 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긴 기간동안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넘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기반의 사기업인 주요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은 독일 사법당국에 극소수의 정보만 넘겨줄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해당 제도가 독일 내 혐오 콘텐츠 문제 해결에 그리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 독일 여러 주에서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시행한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대상 수사는 수사당국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독일 정부가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를 철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해왔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온라인상의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란 매우 어렵고,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이나 수사당국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판단 지침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앞으로 독일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완 및 개선을 해나가야 할 지점이다.

• 참고문헌 •

AP News (2024.3.7.), "German police conduct raids against people suspected of posting misogynistic hate speech online," <https://apnews.com/article/germany-women-misogyny-raids-internet-hate-crime-31d3e61aab90bdce3f6f0d96e21d0fe4> (접속일: 2024.6.10.)
 Bavarian State Criminal Police Office (2024.3.7.), "Searches also in Bavaria on the occasion of the nationwide day of action to combat misogyny on the Internet", <https://www.polizei.bayern.de/aktuelles/pressemitteilungen/063669/index.html> (접속일: 2024.6.10.)
 DW (2022.1.31.), "Germany's battle against online hate speech", <https://www.dw.com/en/germany-s-battle-against-online-hate-speech/a-60613294> (접속일: 2024.6.10.)

네덜란드,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형법 개정²⁾

- 네덜란드에서는 2024년 7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법이 발효되었다. 2021년에 네덜란드 사법보안부(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에서 법안을 상정한 이후 논의를 거쳐 2024년 3월 네덜란드 상원(Senate)에서 최종 가결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효되는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성폭행 또는 기타 유형의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첫째, 피해자는 강간이나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무력이나 협박이 가해졌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없는 경우 성범죄 증거 입수가 어렵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특히 개정된 법에서는 언어적이나 비언어적 그 어떤 형태로든 합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행은 공소시효 적용에서 제외되어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한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성관계는 쌍방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전에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12년 내외로 정해져 있었다.
- 둘째, 성범죄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온라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방된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의 성추행은 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성적 대화(communication)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네덜란드 정부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온라인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면서, 직접

2)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만나 성관계를 제안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성관계 내용을 주고받는 대화, 16세 이하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대화 행위 등을 범죄로 명시했다. 심지어 경찰은 앞으로 16세 이하 아동 또는 16-17세의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을 갖고 접근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용의자로서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심문 또는 구금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경찰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셋째, 이번에 발효되는 법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행위가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처벌 자체도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12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최대 15년, 12-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최대 12년의 징역 형으로 처벌이 확대되었다. 아동 포르노와 관련한 범죄는 징역 6년으로 확대되었다.
- 딜린 예실거즈(Dilan Yesilgöz) 사법부 장관은 개정된 법의 핵심은 성관계에 있어 쌍방향 합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성적 관계는 항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는 온라인상의 소통 혹은 오프라인에서 신체적인 관계이거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사법부는 방송,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해당 법 개정을 알리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법을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년 반 전부터 경찰, 검찰 등 관계 당국 차원에서 점진적인 이행 절차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이행 지침, 내부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 개선, 관계자 역량 개발 등은 이미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약 25,000명이 이번 새 법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 반면 일각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에 있어 '합의'라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이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을 신고한다거나, 합의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인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등 실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증명 문제는 사례마다 복잡한 맥락이 얽혀있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상의 증거, 영상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타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 네덜란드에서 이번에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합의라는 개념을 성범죄에 반영한 점,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아우르는 성추행 및 성범죄를 포괄한다는 점,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즉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범죄의 범위나 피해자 보호 영역을 제도적으로 확장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사법 및 수사기관의 인적자원이 개정법을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증명할 의무는 없어졌더라도 증거 수집과

입증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네덜란드 유관 기관 및 전문 인력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mnesty International (2024.3.19.), "Netherlands: 'Historic victory' as Dutch law adopts consent-based definition of rape",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4/03/netherlands-historic-victory-as-dutch-law-adopts-consent-based-definition-of-rape/#:~:text=Today%20the%20Senate%20voted%20to,on%20July%20the%201st%202024.> (접속일: 2024.7.22.)

Dutch News (2024.7.1), "New modernised and consent-based sex offence law takes effect", <https://www.dutchnews.nl/2024/07/new-modernised-and-consent-based-sex-offence-law-takes-effect/> (접속일: 2024.7.22.)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4.3.20.), "New act to address sexual offences enters into force on July 1, 202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03/20/new-act-to-address-sexual-offences-enters-into-force-on-july-1-2024> (접속일: 2024.7.22.)

Politie Academie (2024.4.11.), "Netherlands Police Academy is developing a teaching aid package on the new Sexual Crimes Act for tens of thousands of police colleagues", <https://www.politieacademie.nl/en/about-us/news/netherlands-police-academy-is-developing-a-teaching-aid-package-on-the-new-sexual-crimes-act-for-tens-of-thousands-of-police-colleagues> (접속일: 2024.7.22)

영국,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³⁾

- 영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4년 3월 모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3,500만 파운드(한화 약 610억 원)를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 금액은 주로 산과 의료인력 및 조산사를 교육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추가로 900만 파운드(한화 약 159억 원)를 출산 과정에서의 영아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빅토리아 앳킨스(Victoria Atkins)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성건강증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여성이 출산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해당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산 전·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 걸쳐 산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은 2024년 발표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의 우선순위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는 2023년에 모성과 신생아 건강증진 3개년 계획(3-year delivery plan for maternity and neonatal services)을 발표했다. 또한 모성의 건강 지원에 있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사회적 건강도 포함해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영국의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 추진 배경

- 2022년 빌 커크업(Bill Kirkup) 전문의가 런던의 동남쪽에 위치한 이스트 켄트(East Kent)지역의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모성 및 신생아 돌봄 실태조사를 시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의 의료 수준이 매우 발달하여 전반적인 모성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의료진이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예방이 가능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가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형성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한 것은 보건의료 인력이 환자(산모)와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안이다. 영국 정부는 이 보고서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리아 콜필드(Maria Caulfield)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국립 모성 및 신생아 돌봄 감독원(Maternity and Neonatal Care National Oversight)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영국 국가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는 보건의료 체계의 관점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가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3개년 계획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는 2023년 3월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산모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계획은 세부적으로 네 가지 주요 사항을 명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1) 유대감을 바탕으로 산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Listening to woman and families with compassion)
 - 2) 서비스 인력의 확충·보존·지원(Growing, retaining and supporting our workforce)
 - 3) 모두의 안전을 위한 문화 개발 및 유지(Developing and sustaining a culture of safety to benefit everyone)
 - 4) 국가보건서비스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과 구조 확립(Meeting and improving standards and structures that underpin NHS national ambitions)
- 영국에서는 산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건 의료진이 진심으로 귀담아듣는 행위가 안전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2022년 커크업(Kirkup) 전문의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많은 사례들이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그로 인해 환자가 보건 의료진과 시스템을 불신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돌봄에 있어 '경청'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이유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와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목표 또한 경청과 정서적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산모 개개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 결과적으로 안전한 출산과 출산 전·후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 앞서 언급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진과 조산사의 인력 확충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3,500만 파운드(한화 약 61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6천 명의 산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며, 이 인력의 대부분은 영아 소생술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예방이 가능한 신생아의 뇌 손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조산사의 일자리 120곳을 확충하여 더 많은 숙련된 조산사들이 산모들의 산후 관리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확충된 인력과 기존 인력 모두에게 사용되며, 특히 산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포함된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술적으로만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어떤 작은 상황부터 위급 상황까지 전문 인력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리하면, 영국 정부는 모성과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접근법을 신체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정서적 지원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영국 정부가 모성 건강을 산모의 출산 전부터 후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산모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정신적 지원에 초점을 둔 정서적 지원이 모성과 신생아 건강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ill Kirkup (2022. 10.), "Reading the signals - Maternity and neonatal services in East Kent - the report of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34fb0afe90e0731ae2a147a/reading-the-signals-maternity-and-neonatal-services-in-east-kent_the-report-of-the-independent-investigation_web-accessible.pdf (접속일: 2024. 7. 31.)

GOV UK(2023. 7. 31.), "Maternity and neonatal care: How are we improving services?", <https://healthmedia.blog.gov.uk/2023/07/31/how-are-we-improving-maternity-and-neonatal-care/> (접속일: 2024. 7. 31.)

GOV UK (2024. 3. 10.), "£35 million investment to boost maternity safety", <https://www.gov.uk/government/news/35-million-investment-to-boost-maternity-safety> (접속일: 2024. 7. 31.)

House of Commons(2024. 5.14.), "Quality and safety of maternity care (England)",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815/CBP-9815.pdf> (접속일: 2024. 7. 31.)

오스트리아, 조부모 육아휴직 공약 찬반 논란⁴⁾

- 오스트리아 칼 네함머(Karl Nehammer) 연방총리(Federal Chancellor)는 최근 조부모 휴직(Großeltern-Karenz) 정책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9월 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네함머 총리가 속한 국민당(ÖVP)에서 이전에도 제안한 적 있던 조부모 육아휴직

4) 광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정책 모델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인데, 정계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본 원고에서는 해당 정책안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찬반 입장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 오스트리아 국민당은 선거 공약에서 아동보육시설 확대와 더불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도입을 발표했다. 제시한 정책안에 따르면 조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대신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 시에는 그에 따른 육아수당을 받는다.
- 수잔 라브(Susanne Raab) 가족부 장관(Family Minister)은 이러한 조부모 육아휴직 모델에 대해 "많은 가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봐주는 일이 육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부모 휴가 제도는 조부모가 된 노령층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국민당 소속이자 오스트리아 노인협회(Austrian Seniors' Association, Österreichischer Seniorenbund) 그리트 코로섹(Ingrid Korosec) 회장은 "조부모 육아휴직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보다 좋은 정책안으로 개발해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지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 현재 오스트리아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Ö)은 이번 조부모 휴가제도 계획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연금 기간에 산정되지 않아 납내 연금격차가 약 40%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여성 법정 은퇴 연령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해야 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는데, 여기에 조부모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가 조부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노령인구의 재정 안정성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민주당은 조부모 육아휴직보다는 국가가 1세부터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관점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육아 및 돌봄 제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민주당 안드레아스 콜로스(Andreas Kollross) 지방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아동 돌봄 시설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 심지어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한 국정 파트너인 녹색당도 이번 국민당의 조부모 육아휴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녹색당의 바바라 네슬러(Barbara Neßler) 가족정책 대변인은 이번에 국민당이 제시한 조부모 육아휴직 모델이 육아의 책임을 조부모에게까지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조부모에게 양육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각 주와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 돌봄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슬러 대변인은 수십 년간 아동 돌봄 시설 확대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정부가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동 돌봄 시설을 확대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가족은 계속 고통을 겪을 것이며 결국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근로를 중단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 국민당은 녹색당의 공식 입장 표명에 유감을 드러냈다. 국민당 베티나 초프(Bettina Zopf) 의원은 녹색당이 주장하는 아동 돌봄 시설 확충과 조부모 육아휴직 도입은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반된 정책안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정부는 이미 아동 돌봄 시설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5억 유로(한화 약 6조 7천억 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오스트리아의 한 언론사 콘트라스트(Kontrast)의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주별로 주립시설 등록, 운영시간, 비용에 있어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주의 주립 유치원 비용은 월 50에서 180유로 정도인데(한화 약 7만 4천 원~27만 원), 공석이 나지 않아 월 500유로 정도(중식 미포함, 한화 약 74만 원)하는 사립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다. 빈(Wien), 카린티아(Carinthia), 부르크렌란트(Burgenland)주에서는 아동돌봄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 비용은 주마다 격차가 큰 편으로, 수도 빈(Wien)은 100%인 반면 오스트리아 서쪽 끝에 위치한 포어아를베르크(Vorarlberg)주는 52%에 그치고 있다.
- 국민당은 아동 돌봄 서비스 및 교육이 오스트리아 모든 주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조부모가 아동돌봄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만들고자 공약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선거 공약의 일부로 제시된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조부모 육아휴직의 구체화 여부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오스트리아는 다당제 국가로, 총선 후 각 정당이 얻은 의석수에 따라 협상을 통해 복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연립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게 될 때 해당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Kontrast (2024.07.31.). "Statt mehr Kinderbildung & Betreuung: ÖVP will Großeltern einspannen", <https://kontrast.at/grosseltern-karenz-oevp> (접속일: 2024. 8. 19.)

Kronen Zeitung (2024. 7. 28.). "ÖVP promotes grandparental leave: "Freedom of choice" <https://www.krone.at/3473833> (접속일: 2024. 8. 19.)

Kronen Zeitung (2024.07.29.). "'Grandparental leave' causes a stir", <https://www.krone.at/3474792> (접속일: 2024. 8. 19.)

Kronen Zeitung (2024.08.01.). "Grüne fordern verpflichtenden Kindergartenausbau", <https://www.krone.at/3478627> (접속일: 2024. 8. 19.)

Profil (2024.07.30.). "Was steckt hinter der Großeltern-Karenz der ÖVP?", <https://www.profil.at/morgenpost/was-steckt-hinter-der-grosseltern-karenz-der-oevp/402930373> (접속일: 2024.08.19.)

영국, 극단적 여성혐오도 테러로 규정⁵⁾

■ 영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벤프 쿠퍼(Yvette Cooper) 내무부 장관(Home Secretary)은 유해한 이념이 초래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국의 대(對)극단주의 전략(Counter-Terrorism Strategy; CONTEST)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새 정부는 여성혐오를 극단주의에 포함되는 유해한 이념으로 주목하고 영국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여성혐오를 대(對)극단주의 전략에 포함시켰다. 이벤프 쿠퍼 내무부 장관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극단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성혐오 범죄가 증가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對)극단주의 전략 검토 및 개정안은 2024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본문에서는 영국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對)극단주의 전략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새 정부에서 여성혐오를 전략에 포함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 영국 정부의 기존 대(對)극단주의 전략 내용

- 2003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영국의 대(對)극단주의 전략은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와 유럽에서 발생한 여러 테러 공격, 또 그 이후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전략은 영국 내의 테러리즘 모두를 다루며 급진화 방지, 테러 활동 저지, 대중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전략에서 정의하는 테러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이나 위협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전략은 시간이 흐르면서 극우 극단주의(Far-right extremism), 폭력적인 동물권 운동과 같은 단일 사안에 관한 테러(Single-issue terrorism) 등 새롭게 발생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극우 극단주의 범죄와 같이 인종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이념에 기반하여 발생한 폭력이나 공격은 테러로 정의된다.
- 영국 정부의 대(對)극단주의 전략은 테러를 예방, 추적, 보호,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예방에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테러를 지지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참여, 교육, 극단주의 이념에 대한 개입이 포함된다. 추적에는 테러 활동을 감지, 조사, 저지하고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 인프라 및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테러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테러 이후에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응급 계획 및 대중 인식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전략은 지속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해 변화하는 위협에 따라 개정되며 정부 부처, 법 집행 기관, 국제 파트너 간의 협력을 통해 테러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임다혜, 런던얼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영국 정부의 대(對)극단주의 전략 검토 과정에서 여성혐오를 포함하게 된 배경과 의미**
 - 영국 정부에서 여성혐오를 극단주의의 형태로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성혐오가 동기가 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혐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여성혐오가 “인셀(Incel, 문화비자발적 독신 (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현상) 문화”가 확장되면서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일례로, 2021년 영국의 남부지방에 위치한 플리머스(Plymouth)에서 22살 남성이 인셀 이념에 영향을 받아 5명을 총격 살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인셀 이념에 영향을 받은 여성혐오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을 보호하는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2021년 여성혐오를 혐오범죄의 항목으로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는 성과 젠더(sex and gender)에 대한 혐오 발언(hate speech)을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항목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결론에 대해 이전 정부는 법원 판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여성혐오를 특정 범죄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년이 지나 새 정부로 당선된 노동당(Labour Party)은 여성혐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공약 이행의 첫 단추로 내무부(Home Office)에서 대(對)극단주의 전략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여성혐오를 극단주의의 항목으로 하여 대(對)극단주의 전략에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은 영국 사회에서 여성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특히 앞서 설명한 인셀 문화가 온라인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많은 여성과 여아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베트 쿠퍼 내무부 장관은 기존의 정부가 2015년 이후 변화하는 극단주의 흐름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여성혐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부재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여성혐오를 극단주의로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여성혐오 범죄에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여성혐오가 극단주의에 포함되면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여성혐오가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 발생 이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여성혐오 이념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념을 확산하는 단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여성혐오가 테러 집단의 이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대중들이 여성혐오 이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혐오를 극단주의로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대(對)극단주의 전략에서 관리하는 테러 집단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처음이다. 여성혐오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셀 문화를 확산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감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게 되면서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과 범죄가 확연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1년 여성혐오를 혐오범죄의 항목으로 포함하고자 했을 때, 법원에서의 판결 문제나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사안이 걸림돌이 되어 무산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24년 10월 해당 전략의 검토안이 발표되면 이후의

합의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ljazeera (2024.08.18.), "UK to conduct review on tackling 'extremist ideologies', including misogyny", <https://www.aljazeera.com/news/2024/8/18/uk-to-conduct-review-on-tackling-extremist-ideologies-including-misogyny> (접속일: 2024.08.18.)

BBC (2024.08.18.), "Misogyny to be treated as extremism by UK government", <https://www.bbc.com/news/articles/c15gn0lq7p5o> (접속일: 2024.08.18.)

GOV UK (2022.08.20), "Making misogyny a hate crime: 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Bill 2021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olice-crime-sentencing-and-courts-bill-2021-factsheets/police-crime-sentencing-and-courts-bill-2021-making-misogyny-a-hate-crime-factsheet> (접속일: 2024.08.18.)

GOV UK (2023.07.13.), "Counter-terrorism strategy (CONTEST) 202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0b1b8d52e73c000d54dc82/CONTEST_2023_English_updated.pdf (접속일: 2024.08.18.)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한 법안 시행⁶⁾

- 호주 내 일부 주에서는 피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동 패턴을 포함한 형태의 피해를 '강압적 통제'로 규정하고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으로 인정하고 있다.
- 호주 시드니 소재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의회에서는 2022년 11월에 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범죄화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해당 법안의 시행을 위해 약 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경찰 대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강압적 통제에 대한 인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그런데 이 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범죄 행위의 적용 대상을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 한정하고 있다.
- 2024년 3월에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이어 호주 브리즈번 소재 퀸즐랜드(QLD)주가 가정폭력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 시행을 발표했다. 퀸즐랜드주의 경우 2025년(날짜 미정)부터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6) 조혜인,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 · 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해당 법안은 Hannah's law(하나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하나 클라크(Hannah Clarke)와 하나의 세 자녀가 로완 박스터(Rowan Baxter·가해자)로부터 비신체적 학대를 당해 오다가 가해자가 차량에 불을 질러 하나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많은 젠더폭력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해당 법제화를 환영하였으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강압적 통제가 시스템의 변화를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호주가 직면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호주 호바트 소재 타즈매니아(TAS)주의 경우 호주 최초로 가정폭력법(Family Violence Act 2004(Tas)⁷⁾을 통해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해당 법의 섹션 8에서는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를, 섹션 9에서는 정서적 학대 및 위협(emotional abuse or intimidation)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약 20년간 10명 미만의 사람만이 처벌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강압적 통제의 입법화 이후에도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의 경우 호주 내에서 가정폭력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멜버른주의 가정폭력법인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08(Vic)⁸⁾에서 이미 강압적 행동(coercive behaviour)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호주 내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 규정 법안은 각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입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NSW Government (2024. 6. 27.), "Criminalising coercive control in NSW", <https://dcj.nsw.gov.au/children-and-families/family-domestic-and-sexual-violence/police--legal-help-and-the-law/criminalising-coercive-control-in-nsw.html> (접속일: 2024.0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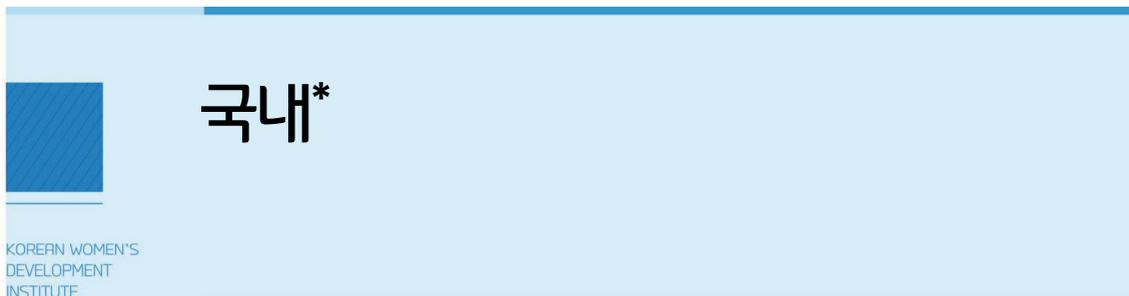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2024. 5. 14.), "Coercive Control in domestic relationships (Submission number 113)", <https://www.parliament.nsw.gov.au/ladocs/submissions/70529/Submission%20-%20113.pdf> (접속일: 2024.08.08.)

Queensland Government (2024. 3. 6.), "New laws to tackle 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in Queensland", <https://statements.qld.gov.au/statements/99847> (접속일: 2024.05.14.)

SBS News (2024. 3. 6.), "Coercive control is being criminalised in Queensland. Here's how it will work", <https://www.sbs.com.au/news/article/coercive-control-to-become-a-crime-in-queensland/7dzj3bmf> (접속일: 2024.05.29.)

7) <https://www.legislation.tas.gov.au/view/html/inforce/current/act-2004-067>

8) <https://www.legislation.vic.gov.au/in-force/acts/family-violence-protection-act-2008/053>



국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함
 -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고,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며,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6.1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7V3GrfrkTxxhPylYJk3eYGo.mogef10?mid=news405&bbtSn=709991

여성가족부, 충남서남부 해바라기센터 개소

- 여성가족부는 홍성의료원(충남 홍성군)에서 '충남서남부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를 개소한다고 밝힘
 - 충남서남부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 진료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등을 설치하였고, 상담원, 간호사, 여성경찰관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피해자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6.2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00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 정부기관, 서비스 지원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다각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사회, 국제기구, 아태지역 8개국 정책 관계자 등이 지원사례 및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6.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0003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표함
-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4,757명)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으며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로 나타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7.0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0015

여성가족부,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고시

-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힘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는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7.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0060

여성가족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밝힘
- 2024년 7월부터 시·도(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추가 시행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7.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060

여성가족부,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8.1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q6HUyfcP+Jnd8NzDBIOBWdW.mogef20?mid=news405&bbsSn=710105

[보건복지부]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발표

-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전반을 포괄하고자 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함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7.0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2142&tag=&nPage=3

정부,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힘
-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통지함
-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며 보호출산제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 가능함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7.1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2334&tag=&nPage=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 일·가정 양립, ② 양육, ③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06.19]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ReleaseDetail.do?articleId=32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함
 -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함
 -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중심의 151개 과제 발표 사항 중 법 개정 사항은 2024년 9월 정기국회 제출, 시행령 등 정부 차원 조치는 2024년 7~8월 개정안 마련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임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07.29]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ReleaseDetail.do?articleId=346&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